

10. 조직구성원의 인간관에 따른 조직관리와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들로서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허즈버그의 욕구충족이론에 의하면, 불만요인을 제거해야 조직원의 만족감을 높이고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 ㉡ 로크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구체성이 높고 난이도가 높은 목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맥그리거의 X이론, 아지리스의 미성숙인 이론의 기반을 이룬다.
- ㉣ 자아실현적 인간관은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비공식적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① ㉠, ㉡, ㉢, ㉣ ② ㉠, ㉡, ㉣ ③ ㉠, ㉡, ㉣
- ④ ㉡, ㉣ ⑤ ㉢,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유형과 그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시장형 공기업 - 한국조폐공사
- ② 준시장형 공기업 - 한국마사회
- ③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④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 ⑤ 기타공공기관 - 한국연구재단

1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13. 근무성적평정 오차 중 사람에 대한 경직적 편견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는?

- ① 상동적 오차(error of stereotyping)
- ② 연속화의 오차(error of halo effect)
- ③ 관대화의 오차(error of leniency)
- ④ 규칙적 오차(systematic error)
- ⑤ 시간적 오차(recency error)

14.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③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④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 ⑤ 국가채무관리계획

15. 예산성과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예산 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일반 국민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16.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는?

-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
-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④ 행정협의회
- ⑤ 갈등조정협의회

17. 정부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예산관리모형은 무엇인가?

-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 ② 목표관리 예산제도
- ③ 성과주의 예산제도
- ④ 결과기준 예산제도
- ⑤ 계획예산제도

18. 우리나라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의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정부내 칸막이 해소에 역점을 둔다.
- ② 빅데이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③ 온라인 민관협업공간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④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역점을 둔다.
- ⑤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에 역점을 둔다.

19.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적 통일성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중요시하여 설치한다.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이 이루어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지역별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 ⑤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20.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주민세 ② 담배소비세 ③ 상속세
- ④ 취득세 ⑤ 자동차세

2014년 6월 28일 시행
서울시 행정학개론 기출문제해설

1. (정답) ③

- ㉠ '진보주의(좌파) 정부관'은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시장이 가지는 결함에 주목하며, 배분적 정의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중시함.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고 시장실패는 정부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봄.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하며, 교환적 정의,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고 정부활동의 축소를 선호하는 것은 '보수주의(우파) 정부관'에 해당
- ㉡ 공공선택론은 정부와 시민을 각각 공공재의 생산자와 소비자로 규정하는데, 전통적 정부관료제의 실패(공공서비스의 독점공급, 소비자의 선택 억압, 시민의 요구에 둔감)를 지적하고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추구함
 따라서, 대규모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를 지향함

2. (정답) ⑤

롤스의 정의론의 제1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 개인은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인정

롤스의 정의론의 제2원리 :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차등조정 원리)

- 기회균등의 원리 :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직무와 직위에 대해 접근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
- 차등의 원리 :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최소 극대화의 원리)

- ⑤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할 때는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 충돌할 때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에 우선함

3. (정답) ④

- ④ 책임경영(기관) : 행정기관의 장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형 정부조직
- 정부수행 업무 가운데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기관장이 재량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

4. (정답) ②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편익의 총현재가치 = 비용의 총현재가치)가 되게 해주는 할인율
-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시중금리) 보다 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
-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이 최선의 대안

내부수익률을 r 이라고 하면, 현재 투자한 비용 80억에 1년 간의 수익률(r)이 반영되어 1년 후 120억원이 된 것이므로

$$80억 \times (1 + r) = 1년 후 120억$$

이를 계산해 보면 결국 $r = \frac{40}{80}$ 이 되므로 0.5 즉 50%가 된다.

5. (정답) ㉟

- ㉠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예 따라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되었음을 주의할 것!
-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임

6. (정답) ㉠

- ㉠ 새로운 문제보다는 정책문제가 관례화 혹은 일상화된 것일수록 정책의제화 가능성이 높음

7. (정답) ㉠

마치와 사이어트의 '회사모형'은 개인적 차원의 만족모형을 기업조직 내부차원의 의사결정에 맞추어 발전시킨 모형으로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최적의 대안을 찾는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
 회사 모형에서의 조직은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하위조직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며,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매우 불확실하므로 조직은 환경에 대해 장기적 전략보다는 단기적 환류를 이용한 단기적 대응책을 강조함.

8. (정답) ㉡

- 내적 타당도 : 원인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경쟁적 원인보다는 당해 정책에만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 정책평가시 1차적으로 확보해야 함)
 외적 타당도 : 평가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
- ㉡ 크리밍 효과 :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만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으로 선정할 때 그 결과의 일반화는 곤란
 호손효과(실험조작반응 효과) :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
 이러한 효과들이 나타나면 해당 평가결과를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므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게 됨

9. (정답) ④

공공서비스 성과의 측정지표(5가지)

투입 : 생산과정에 사용된 것들

업무 :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서비스를 통해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

산출 :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직접적 생산물

결과(성과) : 산출물이 창출한 (환경에 대한) 직접적 변화

영향 : 궁극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① 투입, ② 산출, ③ 산출, ⑤ 영향

10. (정답) ④

동기요인(만족요인) : 조직구성원에게 만족을 주고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

위생요인(불만요인) : 욕구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조직구성원에게 불만을 초래하지만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하더라도 직무 수행동기를 적극적으로 유발하지 않는 요인

㉠ 불만요인의 제거는 불만을 줄여주는 소극적 효과를 얻는데 그치며, 조직 구성원의 만족감 증대와 동기 유발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의 증대가 필요함.

자아실현적 인간관 : 인간의 욕구 가운데 자신의 잠재력을 구현하려는 욕구를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파악

→ 인간의 자율성, 동기부여의 내재성, 개인과 조직의 욕구의 일치성을 강조

㉡ 인간을 애정이나 우정, 집단에의 귀속, 타인으로부터의 존경 등을 원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로 파악하는 '사회적 인간관'은 생산성 향상이 비공식적 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봄

11. (정답) ②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 이상,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 기준(85%) 이상

→ 한국(가스, 전력, 공항, 석유,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인천)항만공사, 한국(중부, 서부, 동서, 남부, 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14개 기관)

준시장형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한국(관광, 광물자원, 토지주택, 도로)공사, 한국마사회 등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위탁집행형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12. (정답) ③

개방형 인사관리 : 신규채용이 공직의 모든 계급이나 직위를 불문하고 공직 내·외 모두에게 허용되는 인사제도

- 장점 : 공직의 전문성 제고, 성과주의적 관리 촉진, 재직자의 자기개발 노력 촉진, 무사안일주의 시정, 정치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데 기여
- 단점 : 직업공무원제 확립 저해, 자의적/정실인사 우려, 공직의 안정성과 계속성 저해, 행정 책임성 저하, 내부 승진기회의 제약, 일체감의 약화, 재직자 사기 저하

13. (정답) ①

- ② 연속화의 오차 : 현재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연쇄적으로 다른 요소의 평정에도 영향
- ③ 관대화의 오차 : 평정받는 자를 실제 수준보다 관대하게 평가
- ④ 규칙적 오차 : 평정자가 항상 관대화나 엄격화 경향(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낮게 평가)을 보이는 것
- ⑤ 시간적 오차 : 전체기간의 근무성적보다는 초기 혹은 최근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

14. (정답) ⑤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로는 ①~④ 이외에도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등이 있다.

15. (정답) ③

예산성과급 :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이거나 지출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 증대 또는 지출 절약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 ③ 중앙관서장은 직권으로 성과급 지급,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16. (정답) ①

(중앙)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지방분쟁조정위원회, (중앙⇄지방)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위원회)

17. (정답) ①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도 : 재정당국이 분야별, 부처별, 부문별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재원을 배분하는 하향적 예산편성제도

- 기획과 부처자율을 결합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
-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별 예산규모를 결정하고 책임성과 권한 강화
- 자원배분계획을 국무위원 회의에서 함께 결정함으로써 재정 투명성 제고

18. (정답) ②

- 정부 3.0 : 국민 개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개방, 공유, 소통, 협력)
-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 알 권리 충족(정부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공개)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데이터 거버넌스 구현)
 - 개인별 맞춤 (공공) 정보 제공
 - 온라인 민관 협업 공간(플랫폼) 구축
 - 정부 내 칸막이 해소(갈등 과제와 협력과제 지원)

②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가 아닌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해 필요함

19. (정답) ⑤

- 특별지방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사무(국가사무)만을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
-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음
 -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세관 등
- ① 국가적 통일성을 중요시함
 - ②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지자체와 마찰 증대, 지방행정의 민주성 상실)
 - ③ 지방자치단체와 명확한 역할배분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우려)
 - ④ 지역별 행정의 책임성이 불분명해질 가능성

20. (정답) ③

- 자주재원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구성(비교 : 의존재원)
(특별시세, 광역시세)
- 보통세 :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① 보통세, ② 보통세, ④ 보통세, ⑤ 보통세
 - ③ 상속세는 국세임